

전남대·GIST에 서울대 연계 ‘반도체 계약학과’ 추진

삼성·SK하이닉스, 5년간 각각 1000억원 투입
거점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정책 연동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확보 청신호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최대 과제로 꼽혀 온 전문인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밝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대는 지방 거점국립대 등과 공동으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교육·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관련기사 2면
참여 대학으로는 호남권 거점국립대인 전남대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GIST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지역 학생들은 광주에서 서울대 수준의 반도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업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클린룸을 활용한 실습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별 투자 규모는 5년간 약 1000억원 수준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전문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광주를 AI·반도체 융합 거점으로 육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서울대 교육과 기업 투자가 결합한 계약학과까지 신설될 경우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는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지방 거점국립대를 권역별 핵심 연구·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국광기술원을 찾아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지역 반도체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남광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 “반도체 현장 실무인력 지역에서 직접 육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설계 인력 확보를 넘어 펌(Fab) 건설과 클린룸 시공, 장비 운영·유지보수, 전력설비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책임질 현장 실무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5면
고용노동부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광기술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광기술원,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대도시 100명을 고용 승계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00명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기업 연계 ‘공동훈련센터’ 추가 지정
팜 건설·클린룸 시공·장비 운영 수요 파악

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못지않게 숙련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이 설계 연구인력만으로 운영될 수 없는 만큼 생산현장을 떠날 실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 단계에서 필요한 시공 인력은 물론 자동화 설비 구축, 초정밀 클린룸 시공, 생산장비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 품질관리, 전력설비 운영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직업훈련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력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지역 대학과 주요 기업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에서는 협력업체 재직자와 신규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또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활용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뿌리산업 인력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지난해 문을 연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

력기술교육원에서는 전력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실습장비,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대규모 전력과 첨단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생산공정뿐 아니라 전력과 설비 분야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팜을 짓고 최종 단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며 “훈련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법원, 위니아 ‘청산형 회생계획’ 인가 결정

근로자·협력업체 재기 발판

광주회생법원이 3일 위니아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장기간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어온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위니아 자산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근로자 100명의 고용 승계도 확정되면서 생계 불안을 덜게 됐다.

광주회생법원에 따르면 위니아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 약 550억원에 비해 부채는 약 53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근로자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만 약 700억원이었다.

위니아는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광주회생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일반 파산보다 근로자와 채권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인가했다. 이후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자산양도 방식’을 추진, 매각금액은 청산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위니아는 자산 매각대금으로 법률상 최우선 번째 대상인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인수는 공장 재가동을 위해 재직근로자 100명을 고용 승계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00명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함께 여는 더 큰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합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입니다.
농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전남광주농협